다산포럼

한국 최초의 근대식 의과대학, '의학교'

황 상 익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의학사

'보건복지통계연보' 2014년 판에 의하면 2013년 현재 보건복지부에 등록된 면허 의사 수는 10만9563명으로 1995년 5만7188명에 비해 거의 두 배가 되었다. 1977년에 의과대학을 졸업한 내 또래 의사들은 면허번호가 1만8000번 전후이니 35년 사이에 의사 수가 여섯 배나 늘어난 셈이다.

재학 시절, 의사 좋은 시대는 지나갔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다. 의사 수도 이미 늘어날 만큼 늘어났고, 앞으로 사회가 더 윤택해지면 의사에 대한 선호는 추락할 것이라는 전망이었다. 하지만, 대학입시에서 의과대학 합격선이 떨어지기는커녕 성적 좋은 학생들이 의대에만 몰리는 현상을 개탄하는 소리가 여전히 높은 것을 보면 예상은 맞지 않은 것 같다.

국제적으로 우리나라는 의사가 많은 편일까, 적은 편일까? 최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자료에 의하면 전체 34개 회원국의 인구 1000명당 활동 의사 수 평균은 3.2명, 한국은 2.2명이다. 한국 보다도 의사가 적은 OECD 국가로는 칠레와 터키가 있을 뿐이다.

'적정 의사 수'를 산출하는 것은 매우 까다로운 일이다. 국가마다 계산 조건이나 고려할 점이 다르기도 하고, 또 의사 수를 늘린다고 환자에게 좋은 것만도 아니다. 어떻든 틀림없는 사실은 한국은 선진국 중에서 의사가 매우 적은 편이며(증가 속도는 가장 빠르다), 지난 20년 가까이 의대 신설 및 의학생 증원 억제라는 의사단체의 요구가 충실히 받아들여졌다는 점이다.

조금 더 거슬러 올라가 보자. 70년 전인 해방 무렵에 의사 수는 얼마나 되었을까? 38선 이남 지역에 대략 2000명, 이북에 1000명가량 의사가 있었다. 당시 인구가 각각 2000만 명과 1000만 명쯤 되었으니 남북 공히 인구 1000명당 의사 수는 0.1명이었다.

의사 1명에 인구 1만 명. 의사는 말 그대로 '그림의 떡'이었다. 700년이 아니라 70년 전 이야기이다. 같은 일제식민지라도 대만은 상대적으로 나아서 인구 1000명당 의사 수가 0.3명 정도였으며 일본 본토는 거의 1명에 육박했다.

그럼에도, 일제는 그 정도나마 의사가 배출된 것도 자신들의 은공이라고 강변했다. 한국인들에게는 근대식 의사를 교육하고 양성할 역량이 없다는 것이다.

한국인들이 근대 의료를 직접 접하게 된 것은 대체로 1876년 강화도조약으로 나라 문을 열면서부터다. 초기에는 이재하, 이현유, 지석영, 최창진 등 민간인들이 우두를 시술하기 시작했다. 우두 하면 지석영을 떠올리지만, 그 혼자만의 공은 결코 아니었다.

그만큼 좁게는 우두, 넓게는 근대 의료의 도입이 당시 대세였다는 뜻이다. 그리고 시기적으로는 일본에 20여 년 뒤졌지만, 일본보다 독자적인 특성을 찾아볼 수 있다.

1885년은 한국 근대 의료사에서 의미가 큰 해이다. 민간 차원에서 보급되던 우두가 국책사업으로 확대되었으며, 최초의 근대식 국립병원인 제중원이 설립된 것이다. 그 전해 발발한 갑신정변으로 반동적인 분위기가 농후한 가운데 근대 의료 도입을 향해 정부가 성큼 발을 내디딘 것은 그만큼 그것이 절실했음을 뜻한다.

국가가 제중원을 설립한 데에는 백성들을 진료하는 목적과 더불어 근대식 의사들을 양성하겠다는 의도도 있었다. 그에 따라 '제중원 학당'을 설치했지만 뜻을 이루지는 못했다. 근대 의료를 안정적으로 받아들이는 데에 필수적인 일이 일단 실패로 돌아간 것이다.

그 뒤 1895년 을미개혁기 의사교육기관 설립이 성사 직전에 이르렀지만 아관파천으로 다시 좌절을 맛본다. 이때까지의 과정이 권력층 주도였다면 이후로는 민중들에 의한 상향식 노력이 전개된다.

그리고 마침내 1899년 최초의 근대식 국립의과대학인 '의학교'가 설립된다. 의학교는 시도로만 끝났던 1880년대의 제중원 학당과는 달리 1902년 최초의 근대식 면허의사 19명을 탄생시키는 성과를 거두었다.

두 차례에 걸쳐 17명의 졸업생을 더 배출한 의학교는 1907년 통감 이토 히로부미가 한국의 의료 장악과 일본인 진료를 위해 세운 '대한의원'으로 통폐합됨으로써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고 만다. 이토가 고종을 황제의 자리에서 내쫓고 한국군대도 해산했던 그 해이다.

3월 24일 오늘은 116년 전 '의학교 관제'가 반포된 뜻깊은 날이다. 의학교는 재동 네거리 남서쪽에 있던 김홍집의 몰수된 유택에 세워졌다. 총리대신 김홍집은 고종의 배신으로 자신이 계획했던 의학교의 설립을 눈앞에 둔 채 참살당했는데, 죽어서 소원을 풀었다. 갑신정변 때 참혹하게 죽은 급진 개화파 영수 홍영식의 집에 제중원이 세워진 것과 마찬가지였던 셈이다.

NGO 칼럼

성폭력 피해에 공감하는 '첫 사람'

김 춘 희
광주여성민우회 성폭력상담소장

지난 월요일 성폭력피해생존자와 성폭력피해에 공감하는 '첫 사람'인 6명의 활동가들이 광주지방법원 법정 첫 공판에 참석하였다. 재판 방청석에 앉아 불구속 상태로 피고인의 자리에서 증언을 하는 성폭력 가해자의 모습을 보는 순간 피해생존자인 친구가 벌벌 떨면서 몸을 사리고 눈물을 줄줄 흘리고 있었다. 잠시 진정시키기 위해 방청석을 나와 복도에서 안아주고 달래면서 성폭력피해 생존자의 힘든 상황을 다시금 절절히 느끼게 되었다. 법정에 올 때까지만 해도 피해 후 시간이 많이 지났으며 마음의 안정을 찾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였으므로 담담하리라 생각했지만 막상 대면하고 보니 진정하기 어렵다는 말이 가슴 깊숙이 그대로 전달되었다. 예전에도 그랬던 피해생존자가 대부분이었으므로…

더구나 법정에서 강간행위 자체를 부인하는 가해자의 모습에 분노와 함께 울분을 내뿜으며 자신의 억울함을 알릴 수 있는 방법을 찾아달라고 호소하는 피해생존자와 함께하면서 '첫 사람'들 모두가 앞으로의 재판에 함께하겠다며 힘을 실어주었다.

광주여성민우회 성폭력상담소에서는 작년부터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2014 막무가내로 달려가는 재판동행지원단'을 모집하여 일정기간 교육 후 성폭력피해생존자의 재판동행지원을 했다. 2014년 12회의 재판에 20여명의 지원단이 피해생존자와 동행하면서 재판을 모니터링하고 피해생존자와 함께하는 지지자임을 알리는 역할을 하였다.

올해는 이름을 바꿔 성폭력피해에 공감하는 '첫 사람'으로, 성폭력 사건을 피해생존자의 관점에서 공감하고, 그 해결을 위해 함께하는 피해생존자의 든든한 지지자이자 조력자인 첫 사람으로 활동을 시작하였다.

본 성폭력상담소에 상담을 의뢰한 피해생존자의 경우 대부분 재판과 연결되어 있다. 재판 일정이 잡히면 피해생존자들은 안정을 찾기 어렵다. 자신의 피해에 상응하는 가해자의 처벌이 이루어질 것인가에 민감하고, 가해자의 처벌이 결정될 때까지 몇 개월의 시간을 참 힘들게 보내고 있다. 그래서 이런 피해생존자들에게 힘을 실어주는 방법으로 피해생존자의 재판 참여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재판과정에서 피해생존자는 재판의 당사자가 아니며, 가해자(피고인)의 신문을 중심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판사는 가해자의 시각에서 사건을 바라볼 가능성이 크다. 피해생존자의 적극적인 재판 참여는 재판부가 피해생존자의 시각에서 사건을 바라보고 판단할 수 있는 중요한 과정이 될 수 있다. 이때 피해생존자의 든든한 지지자가 함께한다면 재판에 참여하는 피해생존자는 든든해짐을 느낀다.

'첫 사람'의 존재는 피해생존자에게 '나의 피해에 공감하고 지지해주는 사람이 함께한다'라고 하는 큰 힘을 실어줄 수 있다.

'첫 사람'은 재판부나 피고인의 변호사가 피해생존자에게 성폭력에 대한 잘못된 통념을 근거로 피해생존자에게 부적절한 질문을 하거나 위협적인 태도는 아니었는지 감시하며 바꾸기 위한 노력을 한다. '첫 사람'은 피해생존자가 가해자의 잘못된 주장을 반박하고 자신의 상황을 진술할 수 있도록, 사건을 해결하는 주체로서 적극적으로 재판에 참여하도록 조력하는 역할을 한다.

작년 '첫 사람'과 함께한 피해생존자들은 '일반 시민과 광주여성민우회 성폭력상담소의 활동가들로 구성된 지원단이 재판을 함께 지켜보았기 때문에 어려운 재판과정을 끝까지 참여할 수 있었다' 라는 소감을 전해주기도 하였다.

성폭력피해로 고소하고 재판을 앞두고 있는 피해생존자, 법정에 증인으로 나가야 하는 피해생존자, 자신의 재판을 방청하고 싶으나 혼자여서 두려운 모든 피해생존자들의 용기 있는 발걸음에 광주여성민우회 성폭력상담소의 성폭력피해에 공감하는 '첫 사람'이 언제나 동행할 것이다. 문의 062) 521-1365,1366.

기 고

무상교육,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

문 상 필
광주시의원

보육대란으로 인해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동을 둔 부모들의 한숨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난해 말 시·도교육청이 임시로 몇 달치씩 편성한 누리과정 예산이 바닥을 보이고 있지만 여전히 정부와 시·도교육청은 근본적인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정부가 지방재정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국회에서 통과된 5064억원의 목적예비비 지원을 4월로 미루고 있어 파장이 커지고 있다.

당장 예비비 지원이 안 되면 가장 먼저 누리과정 지원이 중단될 위기에 처한 것은 광주시 교육청이다. 광주시교육청은 지난해 말 정부가 2조2000억원의 누리과정 예산을 전액 삭감하자 유치원 지원예산 일부를 끌어다 누리과정 예산 120억원을 편성했지만 이미 지난달 모두 집행했다. 당장 이달부터 학부모들과 어린이집이 고스란히 피해를 보게 될 상황이어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하지만 재정이 열악한 광주시교육청으로서는 이렇다 할 방법을 찾지 못하고 있다. 최근 광주시교육청은 광주시에 누리과정 예산 선지원을 요청했지만 광주시는 불가하다며 역으로 유치원 예산을 또 끌어다 쓸 것을 요구하고 있다. 광주시청과 교육청이 중요한 순간에 서로 책임을 미루며 안일하게 대처하고 있는 것이다. 광주시와 교육청은 각성해야 한다.

그동안 지방교육재정의 건전성 확보를 위한 노력과 행정자치와 교육자치가 함께 현안해결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지적에도 아무런 자구책 마련을 하지 않은 결과가 이처럼 급박한 상황에 손 놓고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든 것이다. 근본적인 책임은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은 박근혜 대통령과 정부에 있다. 무상보육 확대시행은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공약이었다. 그러나 정부는 누리과정 비용을 시·도교육청이 지방채 발행을 통해 충당하라며 떠넘기고 있다. 가뜩이나 열악한 지방교육재정을 파탄으로 내몰고 있는 것이다.

영유아보육법에도 명시되어 있다시피 무상보육은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 하지만 2011년 이명박 정부가 누리과정 추진과정에 비용부담을 교육청에서 지도록 시행령을 개정했다. 정부는 경제가 좋아지기 때문에 2012년부터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3조원씩 증가 할 것이고 추가 부담 없이 교육청이 충분히 재원을 확보할 수 있다는 논리였다. 그러나 2015년 교육재정교부금은 1조3475억 원이나 감소했다. 잘못된 전망과 대책 없는 정책추진으로 시·도교육청의 재정 부담을 가중시킨 것이다. 여기에 박근혜 대통령은 재정난 해소를 위해 현행 내국세의 20.27%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비율을 낮추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시·도교육감들은 날로 증가하는 교육수요를 충당하기 위해서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25.27%로 상향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학생 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비율을 낮춰야한다는 기획재정부의 논리에 손을 들어준 것이다.

하지만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학급당 학생 수를 줄이고 있어 학생 수는 줄어도 교육시설에 대한 투자와 필요인력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거기다 인건비와 교육복지예산 등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한정된 재원으로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서고 있다. 이런 상황에 대통령은 교육재정을 줄여 공약이행을 위한 재원을 마련하겠다는 발상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현재의 교육현장을 파괴하는 짓일 뿐 아니라 미래의 교육마저 포기하겠다는 것이다. 대통령은 분명 국민들에게 증세 없이도 무상보육이 가능하며, 모든 문제는 국가가 책임지겠다고 공언했으면서도 자신의 치적을 위해 순식간에 말을 바꾼 것이다. 국민과의 약속은 지켜야 한다.

미래의 희망을 키우는 교육현장에 부담을 떠넘기면 안 된다. 무상보육을 위한 비용을 국가가 부담하고 누리과정으로 인한 논란과 국민의 우려를 종식시켜야 한다. 세법 개정을 통해 부자감세 철회, 사회복지세 신설 등 보편적 복지 실현에 필요한 재원확보를 하기 위한 근본적인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재원마련을 위해서는 증세가 필요하다는 공감대를 형성하고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교육은 백년지대계라고 했다. 지금 당장의 치적과 공을 위해 교육 현장을 벼랑으로 몰아서는 안 된다. 교육은 향후 대한민국을 이끌어나갈 원동력이기기에 충분히 고민하고 해법을 찾아야 할 것이다.

社 說

잇단 캠핑장 화재…광주·전남도 불안하다

엊그제 인천의 한 캠핑장에서 불이 나 5명이 목숨을 잃고 2명이 다치는 참사가 일어났다. 지난해 10여 명의 사상자를 낸 담양군 펜션 화재와 꼭 닮은꼴이다.

더욱이 다음달이면 세월호 참사 1주년이 되는데 이번 참사 역시 엉성한 재난 대비 태세에서 비롯됐다는 점에서 안타까운 마음 가눌 길 없다. 캠핑장 마당에 5개의 소화기가 있었지만 하나도 작동되지 않았다니 말이다.

전국적으로 캠핑 인구는 300만 명이나 된다고 한다. 하지만 법과 제도의 관리 사각지대에 놓인 캠핑장에서는 '인재'(人災)가 끊이지 않고 있다. 캠핑장 내 텐트는 법적으로 건축물이 아니기 때문에 소방법 적용을 받지 않는다. 게다가 화재가 난 해당 캠핑장은 미신고 시설이어서 소방점검 대상에서도 제외됐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전국 캠핑장 1800여 곳 가운데 90%가량이 미등록 영업 행위를 하는 점을 개선하기 위해 캠핑장 등록을 의무화하는 관광진흥법 시행령을 지난 1월 마련했다. 하지만 5월 말까지 등록을 유예했다. 불이 난 캠핑장처럼 관리 사각지대에 놓인 야영시설이 전국적으로 1000여 곳이 넘는다는 얘기다.

광주·전남 지역에도 미신고 시설이 최소한 50여 곳 이상일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문제는 캠핑장에는 취사시설은 물론 냉·난방 등을 위한 전기설비까지 고루 있지만 안전시설은 허술하기 짝이 없다는 것이다. 무등록 캠핑장의 경우 소방도로나 소화기 등 안전 관련된 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못하고 있다.

이래서야 어디 불안해서 가족과 함께 떠나는 '캠핑'을 생각이나 할 수 있겠는가. 펜션과 캠핑장의 경우 규모가 작더라도 소방점검과 소방 특별조사를 받을 수 있도록 단속 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겠다. 아울러 각 지자체에서는 미신고 시설이라 하더라도 수시 점검을 통해 최소한 소화기 작동 여부라도 살펴야 할 것이다.

윤장현 시장 '인사 잡음' 알고는 있는가

광주시가 최근 단행한 산하기관 및 정무특보 내정 인사를 놓고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도덕적으로 부적절한 사람을 임명하는가 하면 어설픈 인사로 논란을 야기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달 초 선임된 빛고을노인건강타운 본부장은 지난 1998년 순천대 총장에게 2000만 원을 주고 전임강사가 돼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데도 광주시는 법적으로 결격 사유가 없다며 최종 입장을 유보하고 있다. 광주시의 인사 검증 시스템이 그만큼 허술했다는 얘기다.

광주관광컨벤션뷰로는 최근 대표이사를 선임하면서 석연치 않은 서류심사 기준을 적용해 일부 공모자의 반발을 사고 있다. 뷰로 측이 지난 17일 1차 서류전형을 통과한 특정인을 이례적으로 면접 당일 탈락시키고, 면접 심사일을 20일에서 갑자기 21일로 연기해 그 배경에 의혹이 일고 있는 것이다.

또 광주시가 지난 13일 정무특보 최종합격자를 발표해 놓고도 임용을 미루고 있어 뒷말이 무성하다. 일각에선 합격자와 관련 의혹이 제기된 때문이라고 한다. 행정부시장은 4개월 넘게 인선이 지연되면서 공무원 조직이 안정감을 찾지 못하는 분위기다.

광주시는 윤장현 시장 취임 이후 측근인 광주신용보증재단 이사장의 자격시비와 시장 선거 캠프에서 역할을 한 측근의 도시공사 사장 임명을 비롯한 정실인사 등으로 비판을 받아왔다. 전국 17개 광역단체장 가운데 윤 시장의 시정 평가가 최하위권인 것도 인사와 무관치 않다는 지적이다.

윤 시장이 시정에 의욕을 보인들 인사를 잘못하면 동력을 얻기 어렵다. 지금까지 인사를 볼 때 현재 시스템에서는 제대로 된 인사를 기대하기 힘들다. 시민들이 납득할 수 없는 인사가 계속된다면 시정에 대한 불신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 윤 시장은 시민들의 걱정을 더 이상 흘려들어선 안 될 것이다.

無 等 鼓

산너머 남촌

"산너머 남촌에는 누가 살길래/ 해마다 봄바람이 남으로 오나~"

파인(巴人) 김동환 시인의 서정시 '산너머 남촌에는'은 시보다 노래로 더 알려져 있다. 1960년대 가수 박재란이 부른 가요뿐만 아니라 김규환 작곡의 가곡으로도 많이 불린다.

봄이 오는 길목에서 한번쯤 라디오에서 듣게 되는 노래이다. 이 글을 읽는 독자들은 서로 다른 분위기의 2가지 노래 버전 가운데 귀에 익은 대로 콧노래를 흥얼거릴 터…. 여기에서 남촌(南村)은 봄 소식을 전해 주는 '이상향'을 의미한다.

아무래도 봄은 꽃이 피면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복수초, 변산바람꽃, 봄까치꽃, 얼레지 등은 일찌감치 봄 기운을 감지하고 꽁꽁 언 대지를 뚫고 나와 서둘러 꽃을 피운다. 소설가 김훈은 소설 '내 젊은 날의 숲'에서 "꽃은 식물의 성기"라고 표현했다. 암·수를 넘나들며 이들을 맺어 주는 것은 꿀벌과 같은 '중매쟁이'이다. 왜 식물들은 이른 봄부터 가을까지 제각기 다른 빛깔의 꽃을 피울까?

강원도 치악산 아래 산방(山房)을 짓고 살며 에세이를 쓴 노(老)수필가 장돈식은 '빈산엔 노랑꽃'이라는 글에서 "이른 봄과 늦가을 눈으로 얼룩진 산에는 노란색이 주류이고, 봄·가을은 붉은 꽃, 청산(靑山)에 피는 꽃은 희다"면서 계절마다 꽃색이 다른 까닭에 대해 짧은 문장으로 명쾌하게 정리했다.

그는 "만약 산야의 모든 식물이 한 계절에 집중해서 꽃을 피우면 그 많은 꽃을 곤충들이 모두 수정시킬 수 없을 것이다"며 "조물주가 이른 봄 해빙기부터 가을이 깊어가는 계절까지 이엄이엄 꽃을 피우도록 배려한 이치가 오묘하다"고 풀이했다. 결국 봄날에 화려하게 단장한 '성기'를 드러내 놓은 식물들의 백화쟁명(百花爭鳴)은 '중매쟁이' 꿀벌을 끌어들여 수정해 씨앗을 맺고자 하는 것이다. 이처럼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사계절 조화로운 자연의 법칙이 지구 생태계를 지탱하고 있다.

완연한 봄이다. 봄볕에 겨운 집 근처 살구나무가 지난 주말 환하게 꽃을 피웠다. 굳이 섬진강변이나 봄꽃 축제장을 찾지 않아도 봄은 어느새 성큼 곁에 다가와 있다. 불현듯 점심시간에 김밥 한 줄 들고 사직공원 숲에서 봄빛을 완상(玩賞)하고 싶다. /송기동 사회2부장 song@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주필 申港樂 편집국장 程厚植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1(일간) |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38 (우편번호 501_710)
대표전화 222-8111·2200-55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안내
〈대표 FAX 222-4918〉 경 제 부 2200-632
편 집 부 2200-649 문화생활부 2200-661
정 치 부 2200-642 여론매체부 2200-696
〈대표 FAX 222-4918〉 체 육 부 2200-697
사 회 부 2200-663 사 진 부 2200-693
〈대표 FAX 222-4267〉 조 사 부 2200-571
경영지원국 2200-515 문화사업국 2200-541
〈FAX 222-8005〉 〈FAX 222-0195〉
광고마케팅국 227-9600 독자서비스국 2200-551
〈FAX 227-9500〉 〈FAX 227-9500〉
디자인실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프로젝트팀 2200-555 〈FA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독자투고·기고 환영합니다
독자투고·기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불편 사항 등을 보내주십시오. 채택된 원고는 고료를 지급합니다. 원고를 보내실 때는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함께 적어 주십시오.
501-710 광주시 동구 금남로 238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 전화 062-2200-696 /팩스 062-222-4918 /e메일 opinion@kwangju.co.kr